

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감시 등 소비자 역할

2025. 6. 30.

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

이황

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고려대학교 ICR센터 소장

I. 물가상승 요인

- ◆ 시장 구조적 요인 : 독과점 심화, 특정요소 병목현상 등
- ◆ 수요 측면 : 소비 집중, 가격민감성 약화,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
 - 기업 행태적 문제(하방경직성, 회복탄력성 부족 등) : IMF 금융 위기 및 코로나 후 금리 회복 지연, 유가 하락 반영 지연 등
- ◆ 생산 측면 : 원재료·에너지·인건비 등 투입요소 가격 상승 등
(효율성 무관한 세계적 공급망 재편)
- ◆ 금융 측면 : 통화량 증가, 환율 상승 등
- ◆ 대외 측면 : 국제통상문제, 전쟁 등
- ◆ 환경 측면 : 기후변화, 환경오염, 질병 등

II. 물가상승과 공정거래법

◆ 공정거래법 내용은 3개 분야로 대별

- ① 경쟁법의 3대 금지행위 :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, 경쟁제한적 기업결합, 부당 공동행위
- ② 불공정거래행위 ③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

◆ 경쟁법 3대 지주는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(consumer welfare) 증진을 목표 – 직접 가격규제의 한계

- 코로나 시기 마스크/소독제 품귀 현상 등

◆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는 '경제적 약자 보호'를 목표 – 소비자 피해를 직접 방지 유형은 예외적(예: 부당고객유인 등)

◆ ① ③ : 독과점=효율성=가격 문제 ② : 불공정↔효율성=가격 문제

II. 물가상승과 공정거래법

◆ 공정거래법 집행 외 대책

- 진입 촉진 등 경쟁촉진정책
- 공정거래법 외 정부규제 : 형법, 금융법, 전기통신사업법, 항공법 등
- 경제정책상 물가 관리 – 대내외 실물/금융대책

II. 물가상승과 공정거래법

정책 간 갈등관계

- ◆ 경쟁정책, 공정거래정책(갑을관계 시정),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상호보완관계 못지 않게 갈등관계의 가능성
 - 소비자정책은 기업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공정거래정책을 견제하는 역할 -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(자영업자) 간 갈등에 주목하는 경향
 - 소비자 후생 ≡ 가격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?
- ◆ 중요한 것은 시너지 효과와 비례원칙(balancing) 적용
 - 중요한 목표는 소비자후생 증진(미시적 차원)과 국가경제의 균형있고 지속적 발전(거시적 차원)의 조화

III. 주요 공정거래법 사건

◆ 대법원 GSK 판결(2014) – 역지불합의(pay-to-delay) 사건

- 의약품 허가-특허 연계제도 시행(2015. 3. 15. 개정 약사법 시행)
-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제조·판매를 시도하면서 특허의 효력이나 권리범위를 다투는 자에게 행위를 포기 또는 연기하는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특허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한 경우
- 역지불합의로 복제약 시장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환자들의 후생을 저해
-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가능

III. 주요 공정거래법 사건

◆ 대한항공-아시아나항공 합병 사건

-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
- 공적자금 회수 등 본래의 효율성=가격 외 정책적 고려 작용?
- 이행감독위원회 10년간 감시
- 항공운임 가격, 비행기 좌석 변경, 마일리지 통합 등

IV. 소비자 역할

◆ 정부 경제정책 대응

◆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

-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- 가격담합 등
- 기업결합 동의의결 등 절차에서 의견 적극 제시

◆ 능동적 소비자

- 가격민감성 제고 - 가격관련 정보공개 요구 및 공유 등
- 소비자를 고려한 정책/법집행 요구 등 수요측 압력 구조화
- 소비자단체 주도로 협상력 제고
- 법적 대응능력 제고

◆ 과징금 기금(소비자권익증진기금) 입법화 활용

V. 결론

- ◆ 다양한 소비자 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
- ◆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/거래질서는 소비(구매)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소비자 후생의 근본
 - 소비자후생 저해의 다양한 징후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소비자들이 법 집행 내지 정책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
- ◆ 소비자단체의 정부, 국회, 기업에 강력한 압박 중요
 - 분산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되지 않아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교정할 수 있는 원동력
 - 집단소송제도, discovery 제도, 3배손 제도의 정상도입

Thanks.

Q & A



KOREA UNIVERSITY
SCHOOL OF LAW



law center